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목 차>

1.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법규화
2.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하는 거래자 보호사항을 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양재 훈
	담당부서 (과)	중소금융과		직급	사무관
	국장	최준우		연락처	02-2100-2993
	과장	김기한		이 메 일	83yjh@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법규화		
	2.규제조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3.위임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8.4.5. ~ 5.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상호저축은행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법규화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고, ○ 그 중 금전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 또는 300억 중 적은 금액(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에서 금전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피규제집단) 저축은행(79개사)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및 대부업자 등		
	9.규제목표	<input type="checkbox"/>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대부업에 대한 자산편중 리스크 감소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input type="checkbox"/>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여 자산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나, 서민 등 금융소비자로서의 자금유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저축은행 자산 편중 리스크 예방 등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기타	12.일 물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원 칙 허 용 · 예 외 금 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3(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제22조의3(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①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 ----- -----.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u>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호)중</u>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각 목의 업종별 신용공여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2. <u>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17-13호)중</u>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각 목의 업종별 신용공여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가. 건설업	가. 건설업
나. <u>부동산업 및 임대업</u>	나. <u>부동산업</u>
3. 제1호의 신용공여와 제2호 각 목의 업종(제2호나목에서 부동산업 중 <u>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은 제외한다</u> )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5	3. ----- ----- (----- ----- <u>부동산임대업은</u> ----- -)에----- -----
<u>&lt;신 설&gt;</u>	4. 「 <u>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u> 」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u>신용공여 합계액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u>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p><u>가. 금전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 또는 300억(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u></p> <p><u>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에서 가목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u></p> <p>② (현행과 같음)</p>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대부업체 대출로 자산 편중 등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나,

- 현행 법규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지도\*로 지도 중

\*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관련 존속기한 연장(저감건전-225, '17.4.28)

\*\*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잔액('17.12말) : 2조 1,322억원

□ (정부개입 필요성)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행정행위(일종의 권고)에 불과하므로 위반시 시정명령 및 제재 불가능한 바, 법규화하여 규제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설정에 있어, 행정지도 상 수준을 감안하여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 금전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총 신용공여한도의 100분의5 또는 300억(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 중 적은 금액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15에서 금전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신용공여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용

□ (선택 근거) 현재 저축은행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행정지도 상 규제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규화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저축은행 및 대부업자, 금융소비자	규정개정 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입법예고 진행 이전

## 3. 규제목표

- ☐ 상호저축은행이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편중을 방지하여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법규화하여 저축은행이 서민 및 중소기업에 직접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편중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함
- ☐ (규제수단) 행정지도 공문으로 既권고 사항을 법규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서민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 해당사항 없음

## ○ 타법사례

- ☐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제17조(현재 입법예고 중)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공문을 통해 지도했던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 ○ 규제 차등화 방안

- ☐ 모든 저축은행에 동일하게 적용

###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감독시 상시 확인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인적, 물적 자원 소요가 없어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 既 수행 업무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저축은행의 본연의 업무를 위해 '15.5월 이후 대부업자에 대해 행정지도 형태로 신용공여 한도 설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시정명령 및 제재가 불가능한 한계 존재하여 법규화 추진

- 동 사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수렴할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 금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을 통해 서민 및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신용공급이 이루어지고, 편중 리스크도 완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하는 거래자 보호사항을 규정		
	2.규제조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5조의4제2항		
	3.위임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8.4.5. ~ 5.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5제3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관련 광고를 하는 경우,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게하는 바, 그 문구 마련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광고에 포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피규제집단) 저축은행(79개사)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자) 저축은행 이용자		
	9.규제목표	<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함으로써, 신중한 대출을 유도하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경미한 규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저축은행으로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경고 문구 삽입으로 인해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은 높을 것으로 예상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기타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4(광고사항 등) 상호저축은행은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4(광고사항 등) ①-----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	<u>② 영 제11조의4제7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u>
	<u>1. 영 제11조의4제6항제1호의 문구는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u>
	<u>2. 영 제11조의4제6항제2호의 문구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추가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로 한다.</u>

##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추진배경) 저축은행법(제18조의5제3항)이 개정('18.2.21)으로,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시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 포함해야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감독규정에서 그 세부 문구를 마련
- ☐ (정부개입 필요성) 저축은행법 상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저축은행이 광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확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대안의 내용) 대출상품 광고 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문구를 타 업권(대부업, 여전업)의 유사사례 등을 토대로 검토
- ☐ (선택근거) 저축은행업권의 경우는 신용등급 하락에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문구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도입
  - ①“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②“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저축은행 관계자 및 이용자 등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입법예고 진행 이전

### 3. 규제목표

- ☐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함으로써, 신중한 대출을 유도하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을 유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토록 함
- ☐ (규제수단) 금융소비자가 대출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광고로, 광고에 금융소비자에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한편, 광고시 문구 일부를 포함시키는 건으로 저축은행으로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준수 가능한 것으로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9제1항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4 (입법예고 중)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업계 자율로 광고시 포함해야할 내용을 정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안내토록 既 규정하고 있음(저축은행 중앙회)

○ 금번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에 대해 규정으로 구체화 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의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음

[저축은행 광고심의 규정]

제22조(의무표시사항) ①저축은행은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생략)

나. 여신상품 :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 부대비용, 이자의 부과시기,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문구 및 연락처(대출모집인 광고시), 그 밖에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하 생략)

○ 규제 차등화 방안

☐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

## 2. 규제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 기존에도 저축은행 광고를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인력 소요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 기존에도 저축은행 광고를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 별도의 예산 소요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동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포함해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업계 및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할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취지와 달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 3. 종합결론

- ☐ 금번 개정은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함으로써, 신중한 대출을 유도하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별도의 비용없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로서도 규제 준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